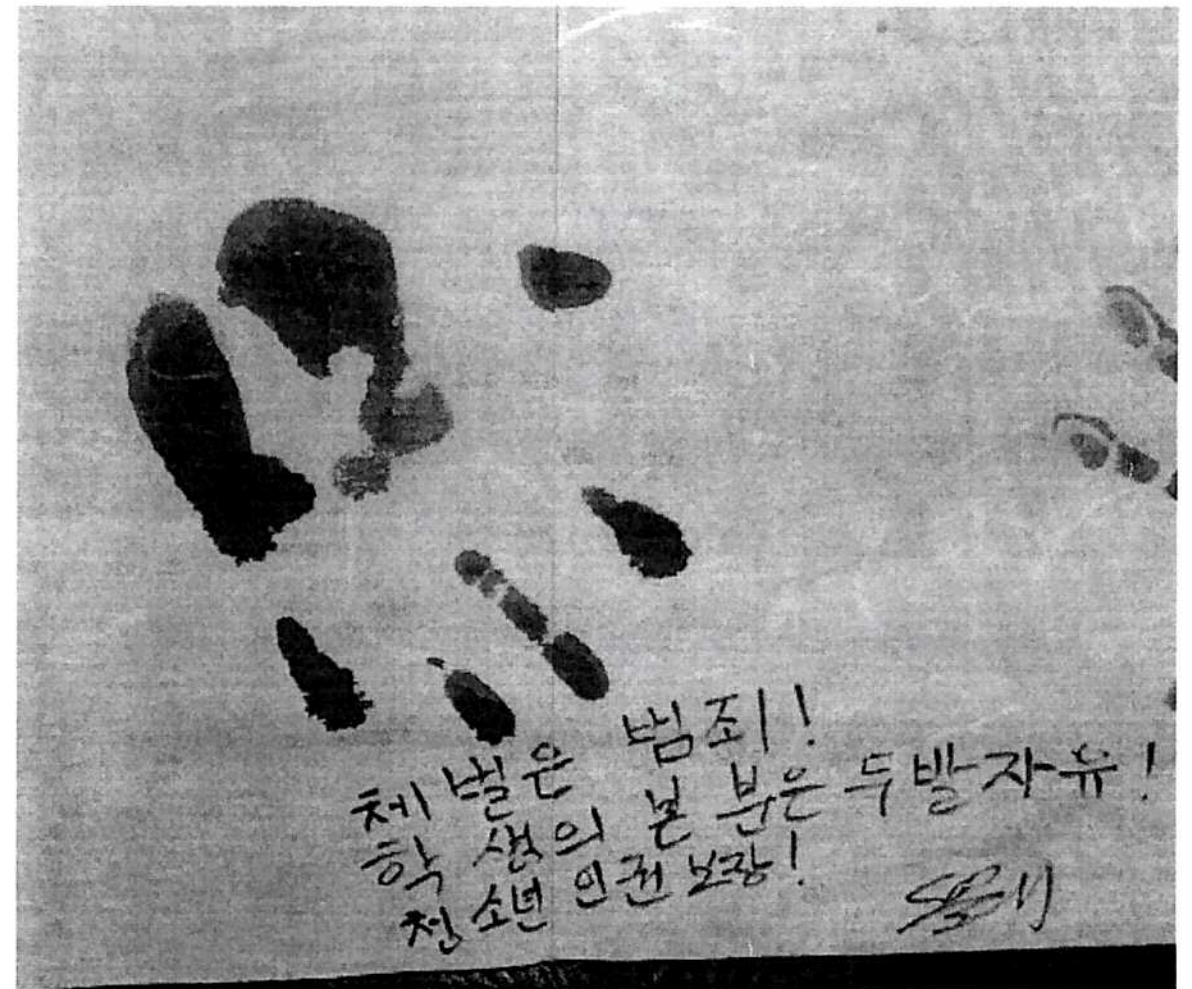


2006 예비교사
청소년 인권 연대 선언
교양 자료



주최 :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후원 : 경인교대 신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예비교사지원국

2006 예비교사 청소년인권 연대 선언

교양 자료

내림마치

- 1.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대응방안 ... 1
- 2. 예비교사들에게 1- "교사틱람" 을 넘어서 / 유은종 ... 23
- 3. 예비교사들에게 2-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디자이너를 위한 안내서 / 오병현 ... 26
- 4. 예비교사들에게 3- 교육과 비폭력 / 이재삼 ... 28
- 5. 예비교사 청소년 인권 연대 선언문 (초안) ... 34

이름이 뭐야. 하나. 청소년인권??

학생 인권의 현주소와 대응과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0. 들어가며

올해 들어 학생 인권과 관련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른바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급식을 3교대로 돌리면서 초등학생들에게 빨리 밥을 먹도록 하고 그렇게 못한 학생들에게 벌로 청소를 시키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키는 교사의 지도방식에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이 줄을 이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학생 인권에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 그리고 학생들에게 열악한 조건의 감수를 강요하는 데서 나아가 아무리 잘못된 지도방식이라고 해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교권의 문제가 이 같은 문제를 낳은 근본 원인이다.

무엇보다 학생 인권을 폭발적 의제로 등장시킨 계기는 지난 6월 군산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부터이다. 이윽고 방학 중인 8월 14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벌 200대' 사건이 터지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타올랐다. 이 학교 박모 교사는 3학년 학생이 5분 정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200여 대를 때리는 폭력을 자행했고, 같은 학교 3명의 학생도 지각을 이유로 매타작을 당했다. 언론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들 학생들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7시 45분까지 등교해야 했었고, 이로부터 강제 보충수업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불과 몇 일전인 9월 25일에는 진주의 한 중학교 학생부장 교사가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 앞 매점에서 군것질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운동장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린 뒤 체벌을 가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학생 인권의 요구를 주체적으로 제기하는 청소년들의 저항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4월 19일 서울 목동의 양동중학교에서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일어났다. 학교측은 학생 시위를 강제 해산한 데 이어 '주동자' 징계에 돌입했고, 청소년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야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다 다시금 두발단속은 강화되어 7월 19일 학생들의 2차 시위가 준비되었으나, 교사들의 원천 봉쇄로 무산되기에 이른다. 이날 시위 계획을 알고 학교를 방문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교문 앞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5월 8일에는 서울 동성고등학교 오병헌 학생이 두발자유, 체벌 금지, 강제보충수업(0교시) 폐지, 교회 집회 참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교문 앞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오병헌 학생에게는 재심까지 거쳐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가 결정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오병헌 학생은 정당성 없는 두발규정에 기반한 징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수원 청명고에서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사전에 이를 눈치챈 교사들에 의한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 통행 제한, 퇴학 위협 등으로 인해 시위가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학교측은 언론과 인터뷰한 학생들을 찾겠다며 핸드폰까지 압수하고 통화문자기록을 열람하기도 했고 밀고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9월 6일 청명고 앞을 찾아가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학생인권사 진전'을 연 데 이어, 이 학교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지난 5월 광화문에서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행사를 연 데 이어 8월에는 전국 7개 도시를 찾아가 캠페인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행진'을 열기도 했다. 7월말 교육·청소년단체들이 연대해 발족시킨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8월 3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서는 등 학생인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9월 16일 학생인권 촛불문화제를 이어서 열어 학생인권법안의 통과에 지속적인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당국의 대책은 굵뜨다. 대구에서 일어난 체벌 200대 사건이 여론의 반향을 크게 일으키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벌을 둘러싼 팽팽한 찬반 대립을 이유로 실제 법 개정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한 교육부는 9월 1일 총 7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을 계기로 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였으나,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적 대책 마련보다 '학교폭력'(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에 치우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적 인식 수준도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바람에 비해서는 현저히 미달한다. 학생 체벌 문제가 연거푸 터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영암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전교생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교장에게 '사랑의 매' 전달식을 갖기도 했다. 체벌금지 여론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동요'를 가라앉히려는 일종의 대항 의식(儀式)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8월 28일 대구에서 또다시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이른바 '목덜미 체벌 사건')과 관련, 지각했

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한 학생 중 하나가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일부 학생이 나서 교사 처벌을 반대하고 해당 교사에게 '힘내세요'라는 응원문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 체벌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체벌금지법 법제화 추진 방침이 보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09명 가운데 2944명인 8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폭력적 사건이 연거푸 터져 나오고 학생들의 주체적 저항도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뚜렷한 방침은 확립되지 못했다. 학생 인권 이슈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기준을 확인하고, 학교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은 학생들로부터 정당성과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어린이·청소년들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생 인권의 현주소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오랫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군림해온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이 글이 학생 신분의 청소년들 가운데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인권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어린이·청소년의 위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에서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은 '보편성'(universality)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위해 바로 지금,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보편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재는 현실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얼마나 허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당한 채, 다른 누군가의 권력에 종속된 삶을 살아간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인 개인으로서, 사회에 참

여하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도, 흔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장 뒤늦게 등장한 권리 주체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의 주체'로, '복지 시혜의 대상'에서 '정의로움(justice)을 요구하는 주체'로 분명하게 규정하기 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서야 채택되었다. '보호에서 자율로'의 변화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장이 낳은 열매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보호주의에 머물러 있다.¹⁾

사회운동의 영역을 돌아보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의 주변부적 위치는 여전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일반적 조건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타인에 의해 대변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인권의 보편성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상의 전쟁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여성운동, 흑인운동, 노동운동, 선주민운동, 장애인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동성애자운동 등으로 스스로를 조직하여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다른 운동의 주변부에 끼어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나, 인권의 주체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관심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가족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존재로, 기존의 사회규범을 따라야 할 존재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할 때에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비로운 성인'에 의한 보살핌을 받는다. 반대로 이러한 '주어진 위치'를 거부하는 '위험한 아이들'에겐 통제와 억압이 따라붙는다.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엄성과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욕구는 쉽게 묵살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닌 만큼, 그들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의 세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들에겐 주어져서는 안될 경험이 존재하며, 그들이 드나들어서는 안될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들과 국가가 허용한 공간-주로는 가족과 학교-과 삶의 경험 아래 유폐된 존재가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유폐'는 그들의 무지와 무권력 상태를 강화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다시금 그들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악순환

1) 최초의 국제적 아동인권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의 전반적 기초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아동관에 기초해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도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을 낳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당한 채 학교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 하에서 학교당국과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청소년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이야말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질료일 텐데, 학교는 오히려 폭력과 부조리와 권력에 굴종하는 순종적 삶의 태도를 '학생다움'으로 교육함으로써 반인권의 질서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문제에 비해 '학생인권' 문제를 극히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학교폭력을 학생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력에 한정하고 있는 것부터가 불평등하다. 교육부는 특별대책팀까지 만들어 학교폭력 소탕 작전에 나섰지만, 이 학교폭력이야말로 학교를 포함하여 사회가 제시하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모델과 문화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눈에 안 보이는" 폭력에 대한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교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택하기보다 일제 단속,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 배치, CCTV 설치 등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감시 위주의 대책은 감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이동시킬 뿐, 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과도 무관하여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2. 학생 인권의 현주소 - 인권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본 학교

1) 국제인권기준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1989년 11월 20일 역사적으로 탄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현재, 유엔이 채택한 여러 인권조약 가운데 191개국이라는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조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은 성인과 다르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 어린이기와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시기이므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는데, 학생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권리 내용으로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권과 정당한 비중의 부여(12조) △표현의 자유(13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4조) △집회, 결사의 자유(15조) △사생활, 명예, 신망을 보호받을 권리(16조) △어린이·청소년의 존엄성과 협약에 부합하는 학교규율(28조) 등이 있다.

특히 이 협약은 '아동권리위원회'라는 조약이행기구를 설치하여 각국의 이행 상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1996년과 2003년 두 차례 최종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권고 내용 중 학생 인권 관련 내용으로는 △교사, 법집행 공무원 등 어린이·청소년 가까이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협약 내용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국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어린이·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는 점 △학교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점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체벌 금지를 위한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이고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의 무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²⁾

이러한 권고 내용은 민간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학생인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온 바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인권단체들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함으로써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계속해서 내모는 결과를 양산해 왔다. 2003년 마지막 권고가 있었던 해로부터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변화를 촉구한 부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수호 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북학생인권백서>를 함께 내놓았다. 백서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학생의 두발불량으로 인한 체벌 경험이 5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염색을 포함한 두발자유(85.7%) △보충·자율학습 폐지(55.8%) △등교시 교문 앞 선도 폐지(50.1%)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에 대해서는 △언어폭력(44.0%) △성적으로 무시(37.1%) △체벌(31.9%) 등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1차 권고는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내일올여는책, 1997)에 전문이 수록돼 있으며, 2차 권고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전문이 공개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의 남녀 중고생 2910명을 상대로 벌인 <청소년인권 의식 및 고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탈의실 부재(81.0%) △잡은 두발규제(62.4%)³⁾ △좁은 교복 선택 폭(61.1%)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 금지(61.1%) △질 낮은 학교급식(53.4%) △강제적인 0교시와 보충수업(49.7%) △처벌시 변론권 미부여(41.9%) 등의 문제를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인권침해로 답했다. 그 밖에 △성적 차별(29.6%) △인신공격성 폭언(20.1%) △성적을 이유로 한 잡은 체벌(13.6%) △손찌검(25.0%)을 당한 경험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최근 몇 해 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학생인권 수준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 교문 앞에 멈춰선 인권

① 학교규율과 인권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식의 입시문화, 그리고 '순종 천국, 반항 지옥'의 권위주의적 통제질서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강제적인 보충·야간학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다움'을 규정한 학교생활규정, 교사 재량행위 등을 통해 일상적 검열과 통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권리가 교문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이다. 입시만을 위해 학생들을 강제로 '뺑뺑이' 돌리는 데 열을 올리는 학교일수록 학생 인권이 시궁창을 굴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⁴⁾

학교에서 강제되는 규율은 학생 본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해야 할 공부를 소홀히 하는 행위, 교사의 가치관에 비해 무례한 태도, '그분들' 보시기에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과 하면 좋은 것(공부 외에는 신경쓰지 않는 것,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 단정한 옷차림과 자세)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이를 상벌체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아이들의 행동을 규격화·표준화·획일화시킨다. 학교의 경직된 규율과 질서로부터의 이탈은 곧바로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일상적 통제를 통해 학교는 순종적이고 동질화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⁵⁾

오랫동안의 법적·교육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체벌과 얼차려는 여전히 일시적 통제효과를 달성하

- 3) 만약 조사 문항이 '잡은 두발규제'가 아니라 '두발규제'였다면 더 높은 응답 비율이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 4) 2004년 사학재단의 학생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의 수업거부까지 이어져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인천외고 사태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와 학생 인권, 나아가 교사들의 자주적 교육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5) 교칙의 학생 통제적 성격에 관한 분석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2001.10)을 참고할 수 있다.

고 학교규율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공부에 전념하라는 자극을 준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성적 공개, 성적에 따른 임원 후보 자격 제한, 교문 앞 등교지도, 불시의 소지품검사, 속옷검사, 두발검사 등 일상화된 검열과 통제를 통해 학생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의 권리, '몸'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소지품검사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압수·수색일 뿐 아니라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러한 검열과 통제의 과정은 흔히 아동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한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소극적·적극 저항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 규율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2차 폭력이 가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② 징계와 인권

단순한 체벌이나 벌점, 교내봉사활동에서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내 징계는 인권 보장을 요구한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4년 4월 부산해사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두발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저항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교실에 돌렸다가 퇴학처분을 당한 바 있고, 올 5월 교문앞 1인 시위에 나섰던 동성고 오병헌 학생에 대해 학교측은 '허락받지 않은 사실 유포'와 '학생 선동과 질서 문란' 등이 포함된 총 5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하려 했다.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앞의 2가지 징계 사유를 슬그머니 빼고 두발규정 불이행 등만 들어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변론권과 재심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교육법 18조 2항에서는 징계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만 있어 학생의 변론권 보장에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학생의 의견 진술은 학생부실에서 강제로 작성을 강요받는 진술서와 반성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징계(선도)위원회 개최 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가 참석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보장하지 않기도 한다. 소선도위원회는 아예 아무런 절차적 구속도 받지 않고 자의적인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학습권까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징계가 적법절차의 권리마저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③ 의사표현, 학교운영 참여와 인권

위와 같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규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규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나 개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아직도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마치 '동맥경화증'에 걸린 듯 학생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칙제·개정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들의 참여는 원천 배제하고 있다. 학생회가 단지 학교의 결정을 전달하는 유명무실한 시너지기구로 전락해 있는 학교들도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어용 학생회'가 학생들의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는 학교도 적지 않다.

0교시,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를 아예 무시한 채 일괄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보충·야자에서 빠지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도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의사를 고려한다. 학생들이 학교의 잘못된 행정이나 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교내 언론활동과 집회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만드는 교지(校誌)나 학교신문, 자발적으로 만든 유인물,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까지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매체를 통해 알리게 될 경우 불만이 확산되거나 학교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고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통제 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3년 용화여고의 허성혜 학생이 학교의 비리를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학까지 당했던 사건이나 2005년 9월 김제서고 1학년 이아무개 학생이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퇴학시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동성고 오병헌 학생에 대한 보복성 징계 시도는 물론이고, 최근 서울의 모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부장이 두발자유 버튼을 달았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징계처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입을 막기 위해 징계 위협을 들먹이는 학교들도 많다. 용 의복장규정을 고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이 학생부실에 끌려가 '조용히 자퇴할래? 아니면 퇴학당할래?'라는 선택을 강요받은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반성문을 쓰면 한번 봐주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면 강제 전학 아니면 퇴학이다. 0교시 강제수업이나 비리 의혹 등이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가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고발자 색출 작업'이다. 불만이 있더라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곳이 바로 학교인 셈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집합적 의사표현도 제대로 보장될 리 없다. 학교는 학생들의 집합적 의사표현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원천 금지

하고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양동중, 청명고에서처럼 학내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외부에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감시와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면키 어렵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가 학교장의 허락없이 학교 밖 집회나 행사에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칙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학교가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여까지 배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알아서 입조심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참여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교장 한 마디로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청 행사나 학교 행사에 강제 동원되고,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활동이 강제로 정해져도 학교는 조용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행사 내용이나 일정이 통보돼도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 학급회의 시간이 시간표에만 있는 유명시간이 된 지 오래이지만, 아무도 학급회의 한번 하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뭔가 불만이 있더라도 '뒷담화를 까는' 정도에 그칠 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그렇게 학생들은 '침묵의 문화', '체념의 문화'에 익숙해진다.

④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종교계 사립학교에 의해 강요되는 종교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2004년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1인 시위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강제 종교교육 폐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이 지난 2005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종교재단 설립학교 가운데 특정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의 92%(38개교 중 35개교), 고등학교의 86%(64개교 중 55개교)에 달했다. 종교과목 외에도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편성 하라는 교육부지침(교육부고시 제1997-15호)을 어긴 학교 역시 중학교 50%, 고등학교 33%에 이르렀다. 종교의식 참여나 종교과목 수강에 대해 학생 동의를 얻는 과정이 요식절차에 불과하거나 이마저도 거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인 상태이다. 대광고등학교만 해도 종교예배 강요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1인시위에 나선 강의석 학생을 퇴학처분하는 등⁶⁾ 외면과 탄압으로 일관하다 결국 예배 선택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강의석 학생이 졸업한 이후 여전히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재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사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나아가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학교에서 강요받기도 하며, 이를 거부한 학생들은 아예 입학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2003년 말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에서 여호와증인 신도임을 밝힌 이 학교 지원 학생이 건전하지 못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그 학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라며 거부하였다)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종교나 사상적 양심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학

6) 이후 강의석 씨는 법원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학교에 복귀했다.

생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3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가 국가관에 대한 가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학내 종교·사상의 자유 수준을 짐작할 만하다.⁷⁾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강요되는 반성문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물론 자기 성찰을 위한 과정으로서 글쓰기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강요되는 반성문은 개인의 신념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판단하는 심판자(학교당국과 대항자로서의 교사)가 따로 있고,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도 심판자의 몫이다. 반성문을 잘 써야 처벌을 피하고 심판자의 용서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반성문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쓰는 성찰의 편지가 아니라, 권력자에게 쓰는 굴복의 문서인 셈이다. 소통과 주체적 깨달음은 교육의 과정일 수 있지만, 선처를 미끼로 내던져진 반성문은 심판자의 의지를 강요하는 반인권적 처벌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관행처럼 행해지는 반성문 쓰기를 예민한 인권의 시선으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3. 학생 인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1) 두발자유와 두발자유

두발규제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당국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규제를 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에서 있었던 'Massie v. Henry 사건'(1972)에서도 재판부는 "두발의 길이가 건강이나 타학생에 대한 안전이나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발의 길이에 대한 학교의 규칙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해 입증책임이 학교측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당국은 한 번도 두발규제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만큼 명백하고 필수적인 근거를 가진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직도 학교는 '학생다움'(여학생의 경우 '여자다움'이라는 기준이 추가된다)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 학습분위기 조성 및 비행 예방의 필요성 등을 앞세워 두발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두발규정이 다른 현실은 '학생다움'의 기준이 그만큼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머리가 길거나 머리모양이 제각각이면

7) 반면 미 연방대법원은 1943년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어떤 관리도 정치, 조국애, 종교, 또는 기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주법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학습분위기가 나빠지고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믿음은 한 번도 증명되지 못한 '미신'에 불과하다. 두발단속에 의지해서 학생들을 '잡겠다'는 발상은 학교교육의 '자신없음과 실패'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령 두발규제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두발규정의 집행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합한 수단과 과도하지 않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나 손가락으로 머리길이를 재든, 바리깡이나 가위로 머리를 자르든 간에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자아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5년 6월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특히 강제 이발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⁸⁾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웬지 두발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근거없는 불안감에 교육적 상상력과 관계맺음의 가능성을 저당잡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바리깡의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있다. 두발규제는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칙을 만들고 언제든지 학생들의 몸을 침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시킨다. 두발규제를 통한 몸에 대한 통제는 정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다. 일제시대와 군사독재 시대가 혹한 체벌과 두발규제, 군대식 훈련을 통해 충실한 '국민'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를 대학에만 보내준다면 더 엄격한 두발규정도 감수하겠습니다"라며 기꺼이 자신의 인권을 반납하고 동료 학생의 두발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학생들의 존재야말로 두발규제의 반교육적, 반인권적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그러하기에 두발자유 외침은 외모 가꾸기에만 온통 신경이 가있는 '철부지들의 투정'이 아니라 교육의 식탁에 평등하게 둘러앉고 싶은 '억눌린 자들의 인권 외침'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자율로 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는 정도⁹⁾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두발제한의 내용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학생단체도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두발규정을 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두발자율론'이다. 이러한 입장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내몰려 있는 학생들에게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학교 단위에서 결코 학생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립하는 절차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다. 좀더 본질적인

8)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2006.6.27)

9) 교육부는 2000년 '노컷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을 때에도, 올해 '200대 체벌'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8월 28일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두발이나 교복 등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두발규제를 과연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가에 있다. 곧 학생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다른 학생의 두발에 대한 강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인권은 다수의 찬성을 얻었다는 이유로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칙은 다수결이 아니라, 학생인권기준을 충족시킬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2) 비교육적 체벌, 과잉체벌만이 문제인가?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온 체벌 사건을 대하는 언론과 일반의 태도는 '과잉' 체벌, '비교육적' 체벌을 문제삼는 방식이다.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도 손찌검을 하거나 수십 대, 수백 대를 때리는 것은 문제라는 식이다. 대부분의 체벌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비교육적' 체벌, '감정적' 체벌, '과잉' 체벌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구분은 체벌의 본질을 가리는 효과를 낳는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는 교사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교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들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사제관계에서 있어서는 안될 '패륜', '폭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물리적 힘은 '체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사제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인식된다. 결국 체벌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집단(교사)이 다른 집단(학생)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행사, 곧 폭력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체벌의 과정에서는 학생을 모욕하는 언어폭력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수백 대를 때려서(체벌의 정도) 문제가 아니라 발길질이나 손찌검을 해서(체벌의 방식)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대로도 학생의 존엄성은 훼손되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체벌교사를 고소하더라도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이내 소를 취하하거나(교사를 법정에서 세운 학생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힘든 현실이다) 법정까지 갔더라도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요즘엔 학생을 함부로 때리는 건 큰 교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체벌도 함부로 못하니 애들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체벌이 실제 줄어들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개는 모든 형태와 수준의 체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심하게 때리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심하게 때리는 교사가 소수라고 해서 체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봐야 할까? 더구나 한 교사의 '지도방식'에 동료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불문율이고 실제 체벌 현장에는 학생들 이외에는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과도한' 체벌이 일어나더라도 현장에서 그 교사를 제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게다가 심한 체벌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 공개되고 학부모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없다면, 학교와 교육청 역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도리어 피해학생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체벌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교사 개인의 '재량'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품성'에다 인간의 존엄성을 내맡겨두는 법은 없다. 모든 남편이 폭력남편이기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부모가 폭력부모여서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찰과 교도관이 폭력경찰, 폭력교도관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독직폭행 금지 법률이 있는 게 아니다. 가족 안의 권력구조, 법집행공무원과 시민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폭력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교육을 한다. 그런데도 학교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교육여건이 교사들을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게 만드는 구조임은 분명하다. 체벌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조건만 바꾼다고 해서 체벌이 사라지는 않는다. 체벌은 구조의 결과만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이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에게 '맞을 짓을 하면 때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 '우리 학교엔 체벌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학생들이 다시금 두발규정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되물어보면 '맞는다'고 답한다. 약한 체벌은 체벌로도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재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며 교사에게 체벌을 주문하기까지 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낸다. 체벌의 가장 나쁜 영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폭력' 이외의 다른 관계맺기와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앗아가버리는 것, 폭력에 저항하는 힘과 삶의 능동성을 빼앗는 것 말이다.

3) 교사-학부모-학생의 동등한 의견 반영이 해법인가?

교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교는 교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 개정 시기에 대해 물어보면 학생 불만이 있을 때마다 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대답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나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다음 개정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몇 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 사이 학생들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계가 따라붙는다.

지난해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뜨거워지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강제 이발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강제로 생활지도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올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확인한 교육부 방침 역시, 교육3주체론을 저변에 깔고 있는 대책이다.

이른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논리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교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동등한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교육3주체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사뭇 민주적인 방식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앙시앵레짐 말기 특권의 유지를 위해 소집된 삼부회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학교 교칙을 통해 인권을 빼앗기는 이들은 학생인데, 학교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입시 위주의 통제'를 유지하는 데 관심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같은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불평등이 아니다. 교육3주체의 의견을 동등한 비율로 반영하다 보면 학생 다수의 의견보다 낮은 수위로 규정이 개정되기 마련이다.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의 억압을 경험하지 못한 남성과 비장애인의 의견을 동등한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교칙을 다룰 때는 어김없이 '교육3주체'론이 등장한다. 더구나 학생회 임원들의 의사를 학교가 적극 조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형식적인 참가만 보장함으로써, 학생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규정으로 위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학교 현실이다.

4)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될 행위인가?

최근 학생들의 학내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위는 곧 강제 해산되고 주도한 학생은 징계 위협에 내몰린다. 대다수 학교가 학생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중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교칙조항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외치며 학내시위를 벌였던 양동중학교 학생들도 징계 위협에 놓였고, 8월말 학내시위를 벌였던 수원 청명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계 위협이 있었다. 실제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기 위해 자퇴서나 반성문을 받아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전에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생들의 학내시위는 '민주적 절차를 제쳐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식된다. 학생들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통제 위주의 사고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도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신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더군다나 학교의 권력관계 하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몇몇 학생이 나서 학교를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학생회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모여서 외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집단행동'의 자유는 학생들이 부당한 학교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더더욱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학생회를 통한 건의만이 민주적이라는 사고 역시 합리적 근거가 없다. 이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로만 좁혀 생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애써 외면한다. 학생들의 집합적 행동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5) 학교는 사적 왕국인가?

학교는 외부의 비판과 직접행동이 학교 담장을 넘어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것 또한 철저하게 불온시한다. 학교 안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개입은 '외부단체에 의한 학생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가져다 붙인다. 교문 앞 규탄 기자회견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학교 안 항의방문은 '사유지 침해'로 인식한다. 교육당국 역시 교직 문제는 단위학교의 '재량사항'이라는 말로 그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최소화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반응들은 노동자들의 집회나 파업에 대해 걸핏하면 '업무방해'죄를 들이대는 기업의 횡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제지하는 이에게 '남의 가정사에 왜 감 놔라 배 놔라'라며 눈을 부라리는 남성 가장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아니 적어도 회사와 가족이 제3자 개입을 불허하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노동법상 '제3자 개입 금지'라는 악덕조항은 이미 사라졌고, 아내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한 개입은 법적으로 적극 권장된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가, 여성과 아동이 가족 내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가의 문제가 한 기업 구성원, 한 가족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님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견줘 지금의 학교를 둘러싼 인식은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 학교는 외부의 개입에 대해 여전히 철의 장벽을 세우고 있고 '사적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사립의 구분도 없고, 교육당국에는 이 철의 장벽을 해체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학교'의 문제는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인식, 곧 '공적 의제'를 '사적 의제'로 전화시키는 인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밀에 부쳐서라도 '학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학생인권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교 담장 넘어 '사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강고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학교의 문제를 공적 의제로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자 개입금지론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성역을 구축해온 학교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6) 학생 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학생인권과 관련한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추락하는 교권'을 다룬 기사들이 뒤를 잇는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 '학생에게 얻어맞은 교사', '무릎 꿇은 교권', '체벌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등의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학생 인권 문제에 교사단체들이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데에도 학생 인권을 보장할수록 교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권(敎權)'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통용되는 교권이라는 말 속에는 교사의 인권, 전문노동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권위라는 말이

뒤섞여 있다. 이들을 분리 해체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교권'과 학생 인권이 반비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우선 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도 그들의 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는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학교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고, 학부모나 교장이나 동료 교사에게 의해 폭력을 당한다면 당연히 피해 교사의 '인권'이 부정당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경우는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한다든지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거나 개별 학생이 자신의 분노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느라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라고 결코 볼 수 없다. 오히려 학생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함께 침해당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학생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는 교사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주말 도심에서 열린 학생 집회에 교육당국이 현장 교사들을 동원하여 '안전지도'라는 명목으로 휴일노동을 강제한다면, 이는 교사의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침해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가 교실 밖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권리가 존재한다. 이는 국가와 학교 관리자에 의한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할 권리'이다. 만약 교사가 수업중에 자신의 신념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교육할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것이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때려서라도 학생들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다면, 이 때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교사의 수업내용이나 지도방식에 대한 학생 혹은 학부모의 문제제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교육할 권리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경찰이 고문을 수사권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타인의 신체와 정신을 훼손하는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결국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교사의 인권 침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교사들이 갖기를 원하는 권위 혹은 권력로서의 교권이 존재한다. '추락하는 교권'이라고 할 때는 주로 교사의 권위 실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권위와 폭력적으로 유지, 관철되는 권력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해진 방식으로 권력에 대한 추앙과 순종'을 요구할 때, 이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으로서의 권위주의가 된다. 만약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마땅히 혁파되어야 할 권력이다.

4.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전사회적 인권의식의 성장과 청소년인권운동의 도약으로 인해 '학생은 미성년자인 만큼 권리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거나 '인권보다 교육이 우선이다'는 주장이 점차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제는 인권이라는 디딤돌 위에 교육을 새롭게 건설해야 할 과제를 회피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위로부터의 통제, 학교 구성원들이 공히 공유하고 있는 침묵과 체념의 문화는 학생인권 침해의 메커니즘을 재생산할 뿐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적·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학생인권법안 통과

학생인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교육당국과 학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대폭 손질하여야 한다. 올 3월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두발규제 금지, 체벌 금지, 0교시와 강제 보충·야자 금지, 차별 금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인권교육 실시 등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대폭 담겨있다. 하지만 국회는 반년이 넘도록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인권의 법적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해야 한다.

2) 학생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학생 인권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한, 끊임없는 논란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고 실효성있는 보장도 제공하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의견 표명¹⁰⁾, 두발·학생징계 등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등을 발표하는 데 그쳤을 뿐, 지금까지 학생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발표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은 교육부 예시안을 기본으로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누락된 인권침해 사안도 많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함으로써 학교생활규정을 비롯한 학교구조와 문화의 전면적 손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¹¹⁾ 나아가 교육부가 준비중인 학생인권종합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10)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2.9.9

학생 당사자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학생인권정책 과제 마련을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3) 실효성있는 학생인권종합대책 마련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생인권 사안이 터질 때마다 지엽적인 대책 추진 방침을 언론에 흘리고,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은근슬쩍 추진 방침을 폐기해버리는 태도를 주로 취해왔다. 대책을 내놓은 경우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 하나 내려보내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식이었고, 그 대책마저도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실효성 없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강제이발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현장에서 강제이발과 폭력을 동반한 두발규제가 사라지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부가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학생인권종합대책이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앞서 짚어본 쟁점에 대한 교육당국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관리감독의 강화 방안, 학생인권 민원 처리 지침, 인권침해 예방책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학내 시위에 대한 원천 봉쇄는 금지된다'와 같은 뚜렷한 방침을 확립,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당사자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워크숍, 토론회의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4)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대구에서 발생한 '200대 체벌'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반면 언론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사건 해결을 미루거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학생들의 저항이 일어난 학교에 대해 교육계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육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만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힘이 부치며,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험은 학생들을 좌절과 체념으로 내몬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권침해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학생 인권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활동은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11) 인권운동사랑방은 교칙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출마자격 제한 대폭 삭제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학생회 권한 강화 △용의복장규정상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의 삭제 △징계절차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변론권과 재심요구권 보장 △체벌 금지 △사상,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 전면 삭제 등을 개정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 참조.

5) 인권교육 활성화

교사 양성과정과 재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학교 관리자들과 학생 인권 보장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도 시급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

6) 교사들의 '인권 역량' 강화와 실천

교사는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약자지만,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강자의 위치에 있다. 교사가 아무리 약자라 해도 학생들이 가진 취약성에 견주어보면 상대적으로 낫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적극적인 학생 인권의 옹호자가 될 수도 있다. 대다수 교사는 그 중간을 배회한다. 현재의 학교구조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져 있는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해 무신경하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은 있으나 어쩔 수 없다며 학교나 동료교사의 횡포에 침묵하는 사람들.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상 방관과 침묵은 현 인권침해구조에 '공모'하는 셈이다. 학생인권문제를 풀어나갈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학생들 자신이지만, 교사들과의 연대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현 구조를 바꾸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주체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인권역량'을 가진 교사들의 지지와 실천은 시급하고도 중대하다.

그동안 전교조는 '단한 교문'을 열며 교육현실과 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열리기 시작한 그 교문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굳건히 닫혀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인권을 학교 안으로, 교실 안으로 적극 불러들이는 일은 억압적 학교제도에 균열을 냄으로써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닦는 일이기도 하다.

사실 학교는 노골적인 방식이든 세련된 방식이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그 본질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 힘은 교사와 학생의 연대를 통해 나온다. 연대의 기초인 소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미세계로 교사들이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전교조 분회, 지부, 본부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는 고사하고 전담자 하나 없는 현실부터 바꾸어나가야 한다. 또한 전교조 경북지부가 보여준 모범적 행보처럼, 교사들 스스로 학생 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선언을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일도 필요하다.

“인권을 실천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가 아니다. 기본이 된 교사다.” 어느 한 교사의 말을 듣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사실 현 구조에서 기본이 아닌 것을 기본으로 만드는 일은 해방의 교육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야만을 택할 것인가라는 선택과 맞닿아 있다.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교사틱함” 을 넘어



유윤종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사를 분류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여하간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교사를 한 번 분류해보자면 세상에는 학생인권침해를 심하게 하는 '나쁜 교사'와 '나쁘지는 않은데 교사틱한 교사'와 극소수의 '교사답지 않은 좋은 사람'이 있다.

'나쁜 교사'는 올 여름 무렵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많은 체벌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뭐, 굳이 언론을 탈 정도의 짓을 하지 않더라도 애들을 일상적으로 때리거나 두발단속을 철저하게 한다거나(강제이발 포함) 학생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언동을 자주 한다면 충분히 '나쁜 교사'가 될 수 있다. 나쁜 교사가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을 처음에 한 대만 때려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점 무더진다나...

'나쁘지는 않은데 교사틱한 교사'라 함은 비록 나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사틱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이다. 교사틱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교사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실천 방식, 혹은 교사라는 위치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은연중에 스스로를 학생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둔다. 이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해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틱함을 이루는 요소에는 교사로서 갖기 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작은 변화에도 쉽게 만족하는 것)이나, 동료 교사에게 별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도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합쳐 '교사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교사틱한 교사 중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좋은 교사도 있고 그저 그런 평범한 교사도 있다.

'교사답지 않은 좋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건 교사라는 지위가 만들어내는 한계에조차 크게 얽매이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목표 또한 그 달성 과정에서 체벌 등의 폭력과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만 한다면 요구되는 교육목표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적이기 위해 때론 교사에게 강제되는 틀을 깨는 사람이다.

왜 마지막 거만 교사가 아닌 '사람'인지 의아할 것이다. 그것은 “교사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의 비난은 아니다. 설명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다.”라는 거다. 아직 잘 전달이 안 되었을 듯하여 지금부터 그 긴 설명을 시작해보겠다.

교육공동체 나다의 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대충 요약해서 옮겨오겠다. 다들 아버지가 딸 셋한테 바지를 한 뼀 줄여달라고 했더니 큰딸은 “내가 만이니까 내가 해야지.”라며 한 뼀 줄이고 둘

째 딸은 “언니는 집안일 하느라 힘들 거야. 내가 해야지.”하고 한 뺨 줄이고 셋째 딸은 “내가 막내니까 내가 해야지.”라면서 세 뺨을 줄여냈다는 옛날이야기,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한다.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는 세 뺨 준 바지를 보면서 “허허. 여름에 반바지로 입어야겠구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글썽 이 가족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 안 드는가? 보통의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한 뺨 줄여달라고 했을 때 세 딸이 논의를 거쳐서 누가 줄일지를 정했을 것이다. 이 가족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 네 명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미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알아서 그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와 세 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유연하게 행동한다면 멀쩡한 바지가 반바지가 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음을 물론이요 아버지가 직접 바지를 줄이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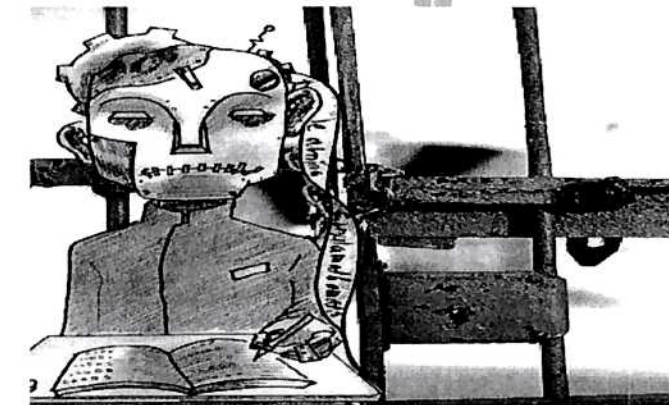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둘 사이의 소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단순히 교사 대 학생으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옵션이 아닌 필수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한 교사에게 교무실에서 뺨을 맞았다고 해보자. 교사틱한 교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든 다른 교사에게 잘 간섭하지 않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그러나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라면,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말리거나 말 한 마디라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을 때리는 교사가 무슨 살인마도 아니고.)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나는 “교사틱” 이상으로서 “좋은 사람”을 둔 것이다.

아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인식은 일상적인 실천 속에 드러나야 한다. 한 교사가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떤 때 학생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화가 나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쌤통이다.”에 가까웠다. 아,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힘들구나, 야 그거 좋은데, 또 해야지. 그 이전까지는 교사로서 행동하다가 스승의 날을 맞아 이벤트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요행은 바랄 수 없다는 소리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글을 쓴 것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교사가 되시면 ‘교사답지 않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아는 교사 분한테 물어보니 예비교사인 사범대 시절에는 그저 임용고시 붙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다. 그런 마당에 교사가 된 이후까지 진지하게 상상하고 고민해보자고 해봤자 얼마나 유효한 제안일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욱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교사가 된 이후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교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나 “좋은 교사가 되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구조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교사틱함”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은 현재 이미 교사인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교사가 아니기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있다고도 할 수 있기에 그다지 ‘교사틱’하지 않은 예비교사 분들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기대한다. 단지 좋은 교사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언제나 인간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가? 자신의 고충과 상처 받는 경험을 털어놓아

도 학생들이 그것을 비웃고 쌤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가? 자기 눈앞에서 사람(학생)이 사람(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맞을 때 그것에 태클을 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학생을 ‘잡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묻고 싶다. 교사틱함을 넘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되려고 노력할 것인지.



죄목 : 대한민국 학생
 영량 : 수능끝날때까지
 죄수번호 : 3학년 5반 14번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네이버 카페〉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비치카이키를 위한 안내서



오병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보통 괜찮은 교사라고 하면 '인간적이면서, 잘 가르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라고 불리면서 칭찬을 받지요. 제가 다니는 동성고에도 그런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들이죠. 평상시에만 말이죠. 제가 일인시위를 하며 교문 앞에 섰을 때에 전 훌륭한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싸웠던 저에게 훌륭한 선생님 중 한 분이 찾아오셨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학교의 명예를 깎아먹은 배신자야. 이쯤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뒤."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은 토론하러 온 것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뒤에 찾아왔던 훌륭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까? 라고 고민하면서 보기에 뻔한 방법들을 대안이라고 제시할 것입니다. '학생을 때리지 말자.' '학급운영에서 애들 말 잘 들어줘야지' '애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 거야.'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학교와 맞서면 어떻게 할까?' 라던가 '다른 교사가 학생을 폭행할 때에 어떻게 할까?' 혹은 '교사는 그 위치 자체로 폭력이 아닌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사라는 직위 자체가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온다는 걸 쉽게 잊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징글맞은 교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학생들과 평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색하게 학생들의 취미 등을 흥내 내는 경우지요. 그런 선생님들은 흔히 "나는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학생들은 먼저 마음을 닫아버려"라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교사들은 언제나 학생을 동등한 상대가 아니라 지식의 모자란 녀석 정도로 여기며 깔았습니다. 제가 교사보다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때조차 말이죠.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교사라는 계급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곤 십수 년 동안 배웠던 대로 교사 앞에서 노예근성을 펼치게 되지요. 이 사회에서 교사의 폭력적 권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징계 받습니다. 이용석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교권이란 것이 교사의 불필요한 권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학생들과 같아지려 하면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먹입니다. 반면,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에 답답함을 덜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징계 받지 않고서도 좋은 교사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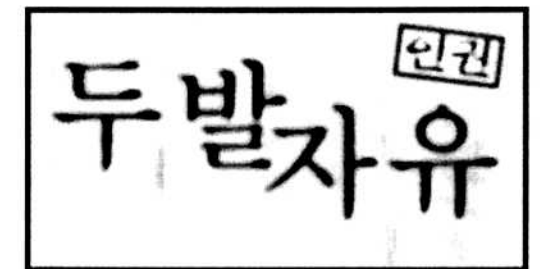
어.' 라고 말이죠. 그런 선생님들은 대체로 자신은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교사에게 맞은 학생이 하소연하면 이렇게 말하죠. "어이쿠 안됐구나. 하지만 그건 그 선생님의 교육방침이라 내가 뭐라 할 수 없구나. 3년만 참고 지내렴." 학생은 3년을 참고 교사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겠지요. 제가 그러하였듯.

고3을 마치면서 느끼는 건 교사 중에서 위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사-학생의 관계는 이 사회에서 폭력적인 관계로 규정지어져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불의에 맞서지 않고 자신만 잘 하면 되지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학생을 한 단계 아래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등이 위선자들의 대표적인 의식들입니다. 학교와 싸우면서 위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위선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무지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투쟁으로 나서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해주자.'식의 생각들을 하는 반면,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학생과 교사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학생도 교사도 같이 배우는 거다.'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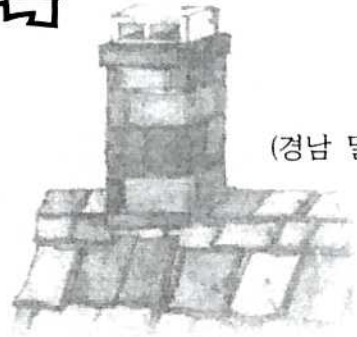
학교 취직하고 몇 년간만 멋진척하다가 위선자의 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훌륭한 교사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면, 학생과 교사의 위계적 계급관계를 언제나 잊지 말고, 학생과 교사 구분하기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간단한 실천과제로는 모두 존댓말쓰기나 모두 반말쓰기 등의 언어생활도 들 수 있겠고, 학교 안에서 투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뭔가를 해 주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연대하여 투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교사-학생의 관계란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한 폭력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체제를 깨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교재로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간되는 '오답승리의 희망' (<http://cantabile.mireene.com>)이 있습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이나 토론하고 싶은 점 등을 기고하고 논쟁을 벌임으로써 교사-학생의 장벽이 없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닫는 학생은 없습니다. 몇 번을 두들겨도 평등해지지 않는 위계적 질서에 질린 학생만이 있을 뿐이죠.



교육과 비폭력



이계삼
(경남 밀양 밀성고 교사, 전교조 밀양지회
ygs0720@hanmail.net)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청소년 인권'을 고민하는 예비 교사들의 부탁으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때마침 제가 일하는 전교조 밀양지회에서는 "학생 인권, 바로 알고 실천하기"라는 주제를 걸고 '인권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거울삼아 지나온 제 교직생활을 비추어봅니다. 여러모로 답답하고 또한 암담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타하는 것은—특히 우리 교육 현실을 두고서는—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을 타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 훨씬 가치롭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저 또한 아이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행동하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폭력'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이런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선생님께서 따끔하게 가르쳐서 단 것을 끊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았을 때, 간디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단 것은 몸에 좋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 먹지 않는 게 좋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긍했지만, 맥이 좀 풀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쉬운 말씀을 하시려고 일주일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때 간디는 답했습니다. "실은 나도 단 것을 좋아했는데, 그걸 끊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여러분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느 후배 교사와 대화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결국 교사의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했습니다. 저는 적이 실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행일치'라는—물론 언행일치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교훈 밖에 떠올리지 못한 것이 저는 못내 아쉬웠던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류의 이야기들에 식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예민해지고, 교육에 대한 생각이 깊은 곳을 향할수록 간디가 남긴 이 일화는 참으로 귀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교육이라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일들의 비밀, 혹은 신비가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인권'을 교육운동 진영이 제기하는 의제의 하나로 국한해서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인권'은 아이들 일상의 전체, 그리고 교육의 일반 원리와 맞닿은 매우 보편적인 의제입니다.

인권과 가장 인접한 주제어는 '폭력'입니다. 그것은 체벌과 두발단속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무시, 냉소, 인신의 자유에 대한 구속, 사회적 편견과 부조리까지 아이들의 삶에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억압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체벌은 여전히 만연해 있지만,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외관상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폭력은 소멸하기보다는 세련된 외양으로 '진화'합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세련된 방식으로 가해지는 무형의 폭력이 아이들을 더욱 깊이 병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폭력의 근원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폭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수많은 성현들이 거기에 대했고, 저 또한 그분들의 말씀을 붙잡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폭력은 '무지(無知)에서 옵니다. 개별 존재에 가해지는 구체적인 폭력은 개별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아이들 세대 전체에 가해지는 사회의 폭력 또한 '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집단적 몰각에서 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논리도 성립합니다. 폭력의 대칭어는 아마도 '비폭력'-사랑-이겠지요. 비폭력, 혹은 사랑의 바탕은 그 대상에 대한 '앎'입니다. 잘 '아는' 존재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폭력이 행사되더라도 거기에는 반성과 구원의 계기가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제맘대로 분류법'이지만, 저는 교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교단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입니다. 대개 교실에서 아이들은 앉아 있고, 교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약간 돌워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고무실로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교사들입니다. 교육현장에는 실은 이런 교사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교단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다/하지 않는다, 단정하다/너저분하다, 교사의 지도에 긍정적이다/부정적이다... 이 사항들은 대개 2진법 객관식이고, 한 존재와 관련한 수백 수천가지 요소 중에서 불과 서너가지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대개 교단에서 받은 '인상'으로 그 아이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박약한 설명력으로 인해 극히 단순한 도덕적 구도로 환원됩니다. '좋은 아이' 혹은 '나쁜(문제 있는) 아이'로 말입니다. 교사들은 순종적이고, 외관상 별 하자가 없으며, 성적이 좋은 아이를 '좋은 학생'이라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단계의 교사라면, '아이들이 앉은 자리로 찾아가는 교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겨우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이지만, 그 단계로만 나아가도 아이들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교단에서 바라볼 때는 말 한마디 안 할 것 같고 몹시 사나운 인상이었는데 가까이에서 말을 붙이면 어린애같은 천진함을 가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 더할 수 없이 모범생처럼 보이던 아이가 실은 극히 자폐적인 내면을 가진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학교 교실이라는 공식적이고 한정된 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의 모습일 따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유형은 '교실 바깥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는 교사'입니다. 가깝게는 남자 아이들과 농구 한 게임을 해 봐도 아이들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학원 다녀오는 아이들과 만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나누어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여도 아이들과 완전히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속한 시공간을 충분히 알고 겪은 교사는 아이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란, 혹은 아이들에 대한 지도란, 이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교사들과 교육행정가들은 이처럼 "아이들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아이들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스쿨 폴리스를 고용해서 퇴역 경찰을 학교에 고용해도, 감시카메라를 학교 복도, 학교 근처 골목길, 아니 온 천지에 매달더라도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없는 것은 이런 시도들이 학교 폭력의 근원에 대한, 아이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무시에 바탕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더러 목격했겠지만, 도저히 체벌이라 할 수도 없을 만치 무섭게 아이들을 때리는 교사의 내면에는 당장의 '화'만큼이나 아이를 때리는 행위로 인해 옥죄어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절박한 충동이 뒤섞여 있습니다.

교사의 지혜로움은 연륜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직에서 지내는 동안, 비록 오랜 세월 교직에 있었지만 여전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그 아이에 대한 판단을 종결짓는 교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고분고분한 아이'를 좋은 학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몇 년 안 되는 경력임에도 아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교사들도 보았습니다. 50대임에도 20대의 영혼을 가진 '청년 교사'가 있고, 20대에도 50대의 영혼을 가진 '늙은 교사'가 있습니다.

4.

이제 사회의 폭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흘러보낸 세월을 추체험하면서 그것으로 지금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비상한 주의집중이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울창이적 시절'을 잘 잊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처럼 자라나는 세대의 삶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시선이 집단적인 도그마로 화석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 사회의 내부는 지독하게 폭력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아동 학대를 가장 끔찍한 범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여섯살부터 시작되는 '인신의 구속', '과도한 학습노동' 같은 기본권 유린을,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편집증적인 욕망'을, 그 속에서 12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사회입니다. 유사 이래 아동에 대한 이런 끔찍한 규정을 가진 사회가 또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사회는 아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어떻게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완전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친구를 사귀고 싶고,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싶은 자연스런 본능은 기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기와 절제의 전사'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폭력에 둔감하며,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회가 되었을까, 더러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어른 세대의 성장기 체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기의 시간, 움터오르는 '에로스'를 틀어막고 견뎌야했던 기억들은 상처로 아로새겨집니다. 상처는 인간성의 여러 요소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억눌렀고, 상상력은 억압당하며, 따라서 다른 삶의 가능성은 스스로 차단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다음 세대로 전이됩니다.

요컨대,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비폭력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멘탈리티를 집단화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력의 원환'(圓環)을 끊고, '정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의 충동을 안으로 삼키고 다음 세대에게는 비폭력을 가르치면서 또한 현실의 폭력과 맞서 싸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5.

'비폭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꼬마아이 앞에 마주 선 간디가 자신을 '마하트마'(위대한 영혼)가 아니라 '저 꼬마처럼 단 것을 즐기는 어른'임을 인정하면서 일주일간의 자기 수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사들은 대개 모범생입니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임용고사 제도가 생긴 이후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지만, 교사들은 다채로운 인생 체험이 없고, 임용을 위해 몇 년간 애써 터득한 기술 말고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의 신분에 대한 자긍심—안도감이라 해야겠지만—은 걱정스러울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다채롭고 난해한 존재입니까. 그래서일까요, 교무실에서는 교사의 지도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을 탓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병상련의 정들을 나누는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는 스스로가 이미 학교 교육이라는 '폭력'의 일부임을, 자신의 내면에도 폭력의 상처가 아로새겨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체로 형성되는데 다가 온 계기들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아이들의 삶과 이 세상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고교시절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범생'이었지만, 대학 시절 4년 내내 열등생으로, 방황하는 영혼으로 살 수 있었음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임용고사에 탈락하여 패배자의 자리에서 본 기억에, 또한 가까운 이들의 죽음과 같은 시련을 젊은 나이에 겪었던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을 이미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비폭력은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공손하고 친절할 말투, 조용하고 따뜻한 대화, 명상,

사색적인 독서와 글쓰기 따위는 우리 교육에 극히 결핍된,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폭력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학의 제1원리처럼 형식과 내용을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입니다. 간디는 젊은 시절 보어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점령한 장사치들의 판을 뒤집어엎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함을 뽐내면서도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위선적인 바리새파 종교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독설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이 아직 법안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안이 설혹 통과된다 하더라도 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는 공식적인 언술체계와 실제 학교 현장의 관행 사이에 실로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시행된지 6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교육 현장에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은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분명 있지만, 우리 교육에는 법과 제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심층이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이 심층이 형성되는데 든 만큼의 반정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폭력의 '형식'을 위한 실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비폭력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실천—우리 교육 안팎에 거미줄처럼 포진해있는 폭력에 대한 토론과 문제제기, 물리적인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가(禪家)의 공안(公案) 같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사냥꾼을 피해 숨을 곳을 찾습니다. 나그네는 토끼를 숨겨줍니다. 좀이어 사냥꾼이 나그네에게 토끼가 간 곳을 묻습니다. 나그네가 지금 있는 곳은 갈림길입니다. 이때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임의의 방향을 가리키면서 사냥꾼을 그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해를 입지 않고 토끼도 지킬 수 있으므로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에게도 토끼를 쫓는, 혹은 쫓을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자리는 서로의 숙명이 부딪친 자리입니다. 결국, 나그네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폭력의 근원—사냥꾼의 사냥을 중지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설득일 수도, 물리적인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그네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는, 이 나그네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교사가 되려 할까요. 오직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유, 즉 정규직 평생 직장으로 교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양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비폭력'은 간디의 어법을 빌어 말하자면 교육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자, 교육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비폭력'은 아이들의 영혼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교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수십년간 내려온 이 '폭력의 원환'(圓環)을 누군가에서부터는 깨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갈급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비폭력을 위한 실천은 '자기 희생' 말고는 달리 다른 길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청탁한 분의 의도에 많이 어긋난 글이 된 것 같아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감 없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긴 시간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어 고맙습니다.

예비교사 청소년인권 연대 선언문(초안)

인간은 날 때부터 존엄하며, 그 존엄함에 합당한 기본권을 가집니다. 기본권은 그/녀가 누구든 간에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을 누림에 있어 청소년 또한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발제한으로 상징되는 신체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하여 체벌, 강제로 실시되는 보충수업·야간 자율학습, 소지품 검사, 집회참가 금지까지 청소년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돈 안주고 일 부러먹기, 임금 떼어먹기, 반말쓰기, 참정권 제한하기 등등. '보호'라는 명목아래 청소년들의 인권이 제한받고 침해받은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비교사인 우리들은 이런 학교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때마다 침통해 집니다. 두발이 잘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을 당하고, 사생활을 침해받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우리들은 이제 교사가 되어 두발을 자르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청소년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치가 우리들이 꿈꾸는 교육을 실현하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 세상에 만연한 폭력과 억압의 고리를 끊고 참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추구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약속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항변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명목으로 옳지 못한 행위들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교육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참된 교육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표합니다. 자율성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청소년이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고 침해받는 현실에 분노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엄과 권리가 박탈된 시체처럼 여겨질 때 그/녀들과 만나야 할 우리 또한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됨과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녀들의 인권침해에 눈감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비교사들은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다시 생각하며, 그/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서지 않겠다는 성찰의 자세로, 나아가 지금껏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 싸워온 청소년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2. 우리는 청소년을 나이, 성별, 장애, 신념, 종교, 가정환경, 학교 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두발을 비롯한 신체는 전적으로 개인의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의 신체를 존중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청소년은 인격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체벌을 비롯한 언어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6. 정규교육과정 외 시간에 대해 학생인 청소년은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진다. 우리는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
7. 우리는 학생인 청소년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성문을 강요하지 않는다.
8. 청소년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신문발행이나 자발적인 결사체 조직, 집회 등을 적극 지지한다.
9.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학생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자치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10. 청소년들의 노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성찰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의 실수를 존중하며, 실수하리라는 예상으로 그/녀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방조하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학생 인권 침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예비교사들이 인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양성과정에 포함시켜라.
3. 국회는 현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마지막으로 험난한 학교현장에서도 참교육을 꿈꾸며 실천하시는 선배교사들에게 제안합니다. 많은 선배교사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직 현장을 잘 모릅니다.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학교가 우리 사회 내 부당한 인권침해의 장소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잘되라는 마음이 분명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교육을 상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폭력과 억압을 끊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상상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에 아파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선배교사들의 더 많은 선언을 기대합니다.

2006년 11월 3일
선언 참가자 일동